

101세 김인순 어르신, 소중한 한 표... “국민이면 꼭 투표”

“우리나라 국민이면 나와서 투표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 투표 첫날 100세를 넘긴 지역 어르신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광주 남구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인 김인순(101) 여사는 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분홍 꽃무늬 블라우스에 차양이 달린 모자를 쓰고 온 김 여사는 세월의 흔적처럼 깊게 패인 주름과 검버섯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이었다.

자신 있게 ‘투표소로 향하자’며 손가락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는 등 김 여사의 쾌활한 모습에 함께 온 며느리 이명자(68)씨도 함박웃음을 지었다.

시종일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주변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던 김 여사는 기표소에서 “눈이 침침해 안보이는데 어디 찍어요”라고 물으며 좌중을 한바탕 폭소케했다.

김 여사가 고이 접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자 주변에서는 “우와” 소리와 함께 응원이 쏟아졌다. “다음에도 투표하러 오세요” 등의 덕담도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모든 투표에 참여했다는 김 여사는 이날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투표 용지를 받아들었다.

평소 전세계 각국의 수도를 외우며 뇌 건강을 지킨다는 김 여사는 나이가 들며 거동이 불편해졌음에도 투표를 향한 의지



광주 남구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인 김인순(101)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 남구 101세 어르신 김인순 여사, 투표장 “대통령 한 번 더 뽑아야죠” 덕담에 “그렇까?”

가 여전하다. 투표일 만큼은 김 여사가 먼저 가족들에게 “(투표하러) 안가냐”고 채근하는 등 유독 정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투표를 마친 김 여사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오래 사셔서 대통령 한 번 더 뽑으셔야

조라는 덕담에는 과인대소하며 “그렇까?”라고 화답해 주변을 흐뭇하게 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건강히 지내며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투표해달라. 모두가 나와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권철 기자

‘지역혁신플랫폼’ 보조금 26억 꿀꺽... 업체대표·법인 송치

자치단체·대학·기업간 협업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 26억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사업 참여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선상에 있었던 사업단장인 교수와 다른 업체 2곳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연구과제를 맡아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7명(법인 3곳 포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치 대상은 사업 참여 업체 중 1곳의 실질적인 경영자 A씨와 업체 대표 3명, 법인 3곳이다.

다만 경찰은 당초 형사 입건됐었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단장 교수(현재 퇴직)와 다른 사업 참여 업체 2곳의 경우 증거

교육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업체 대표 4명 불구속 사업 참여 요건 기술력·소재지 꾸며내고 보조금 전용

‘사업단장’ 대학교수도 입건됐다가 ‘혐의 없음’ 불송치

가 충분치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대학·기업·지자체(산·학·관)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일환인 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26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설비

규모를 부풀리거나 계획서를 꾸며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전남 소재 기업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을 타 지역 업체에서 빌려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 대상 업체 중에는 재료비 지원 명목의 보조금의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시설 공사비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고 경

찰은 전했다.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광주·전남도 지자체와 사업총괄인 전남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지역 혁신기관 37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전략과제는 ▲에너지신(新)산업 ▲미래형 운송 기기 창업 활성화 등이다.

앞서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 첩보를 입수해 2023년 8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사업총괄대학인 전남대 사업단과 참여 민간 업체, 부설 연구기관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단장이었던 교수가 업체들의 보조금 부정 수령을 관여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정 수령 집합 사례를 두루 살펴봤으며 최근 1년 10개월여 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수술母 통화’ 수행자 요청, 교도소 불허... 法 “제한 과도” 수행자, 광주교도소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수감 도중 노모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싶으며 전화통화를 신청했다가 불허 당한 수행자가 교도소에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가족과의 접근·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수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경중)는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전화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A씨에 대해 지난해 8월에 내린 전화통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올해 1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A씨는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중경비 처우’(S4) 수행자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어머니의 다리 관절·허리협착증 수술 등에 대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기를 원했다.

A씨는 교도소 수감관리팀장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안부 차,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구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교도소 측은 ‘전화통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며 통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중경비 처우 수행자는 관련 규정상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중경비처

우급 수행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서 통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근·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통화 불허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명백히 불필요한 전화 통화를 반복 신청하는 등 전화 통화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감된 교도소에서도 같은 사유로 전화통화 신청이 불허될 위협성이 인정된다”며 “수행자의 접근·교통 기본권 보장, 교정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사법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통화 처분 취소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교도소 내 전화 사용을 확대하던 기존 기조와 달리 2023년 9월부터는 수행자의 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중경비처우급(S4) 수행자는 원래 한달에 5차례 통화가 가능했지만 가족 사망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행자의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입법 전에도 수행자의 전화 허용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송현근 기자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내년 3월 국립목포대로 새출발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이 최종 승인됐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대학 통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고 내년 3월 1일자로 ‘국립목포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출범한다. 29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방대학 간 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 대학은 지난해 1월부터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공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캠퍼스 특성화 전략 ▲학사 및 행정조직 개편 ▲전문학사·학사 간 학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담은 통합안을 마련해 왔다.

통합안은 구성원 의견수렴, 학내 설명

회,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정리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신청서가 제출됐다.

교육부는 이후 7차례에 걸친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통해 통합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캠퍼스 운영 전략, 학사 구조 개편 방향,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28일 두 대학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통합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2년제와 4년제 학위과정을 하나의 대학 안에서 통합 운영하는 고등교육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학사 과정으로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